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음 10월 10일) 제16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실상 '무산'

전시컨벤션센터 이어 대체시설 중앙투자심사도 '재검토' 결정

민선 6기 3년째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허송세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컨벤션과 공연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 빛을 얻기 위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계획을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일방적 변경을 통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다 전북도와 갈등을 빚어 무산된데 이어, 대체시설 건립도 어렵게 되면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장미빛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에 의뢰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미비 등을 들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시가 전북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총 사업비 760억원(공사비 620억원, 토지매입비 140억원)을 투입, 육상경기장(1만5,000석)과 야구장(8,000석)을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전북도와 갈등으로 무산된데 이어 이번에도 전북도와 진전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여 사업이 무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전주시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려던 전시·컨벤션센터도 전북도와 양해각서에서 명기한 대체시설 건립 계획과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초 전주시는 총 사업비 683억원 들어 종합운동장 부지인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번지 2만6000㎡ 부지에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



“김장철이 왔어요”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김영순 회장과 회원 20여명이 8일 자원봉사센터 마당에서 동절기 저소득부자가정 100세대의 함께 나눔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그며 즐거워 하고 있다.

시장 및 부대시설과 함께 호텔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북도에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가 유보된데 이어 12월 31일까지 공사 발주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고 국비로 확보한 70억원마저 반납해야 했다.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전주시와 전북도의 갈등은 전주시의 일방적 사업방식 변경에서 출발한다.

민선 6기 들어 전주시는 종합운동장을 재개발 사업을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 전시컨벤션센터와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민선 5기 송하진 시장 당시 민자를 끌어 들인 '기부대양어' 방식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고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도 부실한 상태에서 종합경기장 시설을 대체할 체육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

단을 내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재정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을 고집, 민선 6기 들어 3년째 허송세월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3000억원 이상 가용재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종합경기장 대체 체육시설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며 “재검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한 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계획대로 내년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해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이같은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전북도와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고집스럽게 재정사업방식만을 고수하면서 전주시가 오히려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2면 정운천 의원, 예산안조정소위 '돌연' 제외

3면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 도매가 급격 하락세

농축협 쇠고기 매출 30.2% ↓
축산물프라자 매출 23.8% ↓

반면 소매가격은 소폭 상승 소비활성화 걸림돌로 작용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급락하고 판매 또한 위축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이 틈을 타 마진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과 가격 강제가 겹치면서 최근 소비 저항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협이 운영하는 쇠고기 매출은 30.2%, 정육점형 식탁인 축산물프라자 매출은 23.8% 각각 하락했다.

주간 쇠고기 매출을 집계한 결과 9월 넷째 주에 22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10월 넷째 주에는 155억원으로 불과 한 달 사이에 30.2%가 감소한 것이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축산물프라자 매장 중 15개소의 동향 조사에서도 대부분 매출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인근에 입지한 매장이 일반 매장보다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부정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도매가격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26~30일 5일 동안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1kg당 1만8,470원에서 10월 24~28일에는 평균 1만6,784원으로 12.5%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소매가격은 미동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6~30일 한우 부위별 평균 소매가격(100g)은 등심 7,955원, 갈비 4,999원, 불고기 4,677원이었다.

그러나 10월 24~28일에는 등심 7,996원, 갈비 5,101원, 불고기 4,740원 등으로 조사돼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우고기 평균 가격은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도매가격)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소매가격)에서 조사해 매일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의 여파와 소비 위축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해 한우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사이 도매가격에 연동되지 않으며 여전히 비싼 소매가격이 소비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소매 가격격차가 벌어진 만큼 소매유통업체들의 한우고기 판매 마진폭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은 가격하락 및 소득감소, 수입육 증가, 고급육 시장 위축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한우고기의 대중화와 가격 대비 고가치 상품개발, 신시장 창출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안재용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신임 대변인단 임명

국주영은·정호영·양성빈 도의원 등 3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임 대변인단과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을 임명했다.

8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국주영은과 정호영·양성빈 전북도의원 등 3명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또 부대변인으로는 백영규·고미희·이명연 전주시의원을 비롯해 김준수 군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김태권 익산갑지역위원회 조직국장, 김진만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상무

위원, 이정민 남원시의원, 백창민 김제시의원, 오재만 정수군의원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은 박재만 전북도위원이 임명됐다.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사회의 불공정한 갑과 을 등의 민생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자 및 비정규직의 조직 사업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뉴스

가스안전은 가족사랑입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고객의 꿈과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

전북도시가스는 당신의 가스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1. 굴착공사계획 신고
☎ 1644-0001
www.eocs.co.kr

2.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4. 굴착공사개시 통보

5. 굴착공사 시행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사칭한 범죄 예방 및 방문 예정일 사전안내 문자 (SNS) 서비스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40-7755-6)